

SAd.a.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교육자료 1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교육용자료가 연속적으로 나올 것이므로, 표지의 구성은 일관되게
하고, 색깔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목 차 〉

머리말

1. 일본군'위안부'문제란?

- 1) 일본군'위안부'문제란 무엇인가?
- 2) 용어사용의 배경 : 종군위안부,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성노예'
- 3) 일본군'위안부'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2.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운동, 시작과 전개

- 1) 첫시작
-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발족, 수요시위 시작,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 3) 국제활동
- 4) 아시아연대활동
- 5)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반대운동의 전개
- 6) 대(對) 한국정부의 활동과 입법운동
- 7) 남북의 만남

3. 전 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은 지금

- 1) 할머니들의 현황
- 2) 할머니복지활동
- 3) 할머니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각계의 활동

4. 2000년을 맞이하는 정대협운동

- 1)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 2) 교육관 사업
- 3) 전쟁과 여성인권센터(가칭)건립

부록 1. 정대협과 함께하는 단체들

1. 회원단체소개
2.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대단체들
 - 1) 국내관련단체
 - 2) 외국관련단체
 - 3) 아시아피해국의 관련단체들

부록 2. 정대협 연혁

부록 3. 관련도서 소개

부록 4. 관련인터넷 웹사이트

부록 5. 별첨자료

1.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주요대응
2. 일본군위안부 문제관련 일본 망언록
3. 정대협의 주요 유엔활동일지
4. 정대협의 ILO활동일지

머 리 말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에는 여성시대와 국제사회의시대가 열린다고 한다. 이미 그 정조는 보인다. 그러한 역사의 새 장을 맞기 위해 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는 공부를 해야겠다. 어떠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앞으로는 다신 한 인간으로 세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만큼 그 사람은 자기를 만들어낸 그 시간과 공간에 뿌리를 내려야 자신 있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2000년 1월에 서있는 우리는 아직도 추리를 노예로 만들었던 일제 시대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듣기 싫어 피할 것이 아니라 끌어안아 공부하고 해결해야 한다. 일본에게만 책임이 있나? 우리는 무엇을 해 왔다. 분단은 그대로이다. 북한은 세계에 식량을 요청하고 남한은 IMF를 졸업했다고? 이것이 우리의 그림이다.

여기 우리의 가장 암울했던 역사의 한 토막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애써온 정대협이 움직임을 정리해 보았다. 이것은 책자를 시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있는지 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빚진 역사 정리에 기여하고 여성의 시대와 국제사회시대에 당당한 일원으로 나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다.

윤정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1. 일본군'위안부'문제란?

1) 일본군'위안부' 문제란 무엇인가?

'정신대' 혹은 일본군 '위안부'라고 불리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일본정부와 군, 혹은 기업에 의해 전개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여성을 성노예화한 것을 말한다.

1932년 무렵에서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는 침략 전쟁을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확대해 가며, 점령지구에서 "군인들의 강간행위를 방지하고 성병 감염을 방지하며 군사기밀의 누설을 막기 위한다"며 일본과 당시의 조선과 대만 및 점령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동원하여 군대 주둔지역과 최전방 전투지구에서 집단적으로 수용, 군인들의 성적 노리개로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할린과 일본 류슈 등의 전쟁 추진을 위한 건설 공사, 군수품 공장 등에서 노동하는 조선과 중국 등에서 동원된 남성을 상대로 일본정부와 기업이 결탁하여 '위안소'를 경영하였다.

10만 명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여성들은 속임수와 폭력을 통해 연행되어 구 만주, 중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아,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과 일본, 한국 등에 있는 점령지에서 성노예로 혹사당했다.

열 한 살 어린 소녀로부터 서른이 넘는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여성¹⁾들은 '위안소'에 머물며 많은 숫자의 일본군인들을 상대로 성적행위를 강요당했다. 한사람이 하루에 적게는 7~8명, 많을 경우 40~50명까지 상대해야 했으며 거부할 경우 심한 매를 맞거나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지역에 따라서 이들은 군대와 함께 옮겨다니거나, 트럭에 실려 군대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이들의 인권은 완전히 박탈되어 군수품, 소비품 취급을 받았다. 전쟁이 끝난 후 귀국 하지 않는 피해자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 현지에 버려지거나, 자결을 강요당하거나, 학살당한 경우도 있다.

2) 용어사용의 배경 : 종군위안부,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일본군성노예

①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 강제종군위안부(強制從軍慰安婦) 혹은 전시 성적 피해자(戰時 性的 被害者): 일본군의 성적 대상을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로, 그들이 수모와 고통을 당한 현장을 '위안소(慰安所)'라고 부른 것은 패전 전의 일본 군부였다²⁾

'종군위안부'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 적절한 명칭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화하자,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강제종군위안부'라고 명명함으로써 그 동안 문제되어 왔던 종군위안부의 자발성을 삭제하고 '강제'라는 의미를 부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입법활동단체들은 '전시성적 피해자'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안소에서 강제적으로 성노예 생활을 하였던 '위안부' 뿐 아니라 일본군에 의해 대규모적으로, 조직적으로 강간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여 전쟁 중 성적 피해를 당한 여성들 전체를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② 정신대(挺身隊):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이름은 '정신대'이다. 원래 '정신대'란 말은 일본의 전시체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 등을 지칭한 남녀를 모두 지칭하는 일반 명사였다. 당시 조선에는 1944년 여자

1) 당시 일본군의 방침은 만 17세에서 20세까지의 신체 건강한 미혼녀를 연행하는 것이었다.
2) '종군위안부'라는 명칭은 마치 '종군 기자'와 같이 자발성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강제성이 부인된다. 따라서, 그 동안 '종군위안부'라는 명칭이 일본 내에서 사용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에 기인한다. 이러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 후의 일본에서는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고, 피해민족의 하나인 한민족의 남북학계에서도 역시 그대로 사용해 왔다.

정신대령이 내려졌다. 이 령에 의해 13-14세의 소녀들이 모집되어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 말기에는 당시 조선에서 전쟁노동력으로 동원된 여자에 한해서 '정신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런데 악덕 포주, 면장, 면서기, 이장들과 순사와 군속 등이 소녀들에게 정신대로 나가 공장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성노예 삼은 일이 대부분이었기에 한국사람들에게는 '정신대'가 '위안부'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정신대로 나간 소녀들 중 성노예로 강제 입부 전환된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성노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불렸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기 위해 갔던 소녀들은 근로정신대로 구별하여 불리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황이다.³⁾

③ **일본군'위안부' 혹은 일본군 성노예** : 현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는 당시 자료 속에 있었던 '위안부'라는 명칭을 인용해, 역사적 용어로서 일본군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잠정적으로 일본군'위안부'라 부르고 있다. 원칙적으로 '위안부'라는 용어가 적합하지는 않지만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여 고유명사로서 일본군'위안부'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개념은 **일본군 성노예**이다. '위안부'제도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강제적으로 성적 노예생활을 강요당했다는 차원에서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유엔인권위원회나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 보고관들의 보고서에는 일본군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④ **기업 위안부** : 연행 배경과 방식은 일본군'위안부'와 마찬가지로인데 '위안소'를 찾는 남성이 일본군인이 아니라 광산이나 공장에 연행된 당시 조선 남성이나 중국남성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기업 위안부'문제는 '위안부'문제에 비해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사할린, 오사카, 도야마 강, 큐슈의 북부 탄광지방에 많이 연행되어 갔다.

3) 일본군'위안부'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나?

① **민족의 문제**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주의적인 국가 권력이 만들어 낸, 강제연행, 강간, 고문, 학살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잔학한 범죄"이며 "일제가 징병, 징용 등과 함께 '위안부' 제도를 통해 민족 쇠퇴책 혹은 민족 말살정책을 기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안부'는 사창(私娼)도, 공창(公娼)도 아니다. 특히 일본 본토에서 자발적으로 동원된 일본인'위안부'와 강제 연행된 조선인 '위안부'는 엄격하게 구별된다.

'위안부'문제가 이 사회에 제기된 이후, 범 여성계의 차원으로 그리고 사회운동 차원으로 보다 빨리 흡수될 수 있었던 요인의 하나는, 바로 민족의 문제로 '위안부' 문제를 풀어내는 시각 덕택이다. 이는 국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연대 세력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매개 요소로 작용하였다.

② **성의 문제** : '위안부'문제는 민족차별적인 시각과 동시에 남성을 중시하는 가부장(家父長)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는 남성중심의 권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을 가사노동과 출산, 양육의 책임을 맡는 여성과, 성적 노리개 역할을 하는 여성 등 두가지 여성으로 파악하고 있다. '위안부'제도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남성이 여성에

3) 근로정신대로 나갔던 피해자들 중에서 사람들이 자기들보고 '위안부'로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대협은 '정신대' 혹은 '위안부'의 명칭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용어가 성노예이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의논하였다. 그때 피해자들은 '성노예'라는 용어에 거부감이 있어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대한 사회통제 기제의 하나로서 성폭력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이 문제 의식 속에서는, 물론 조선인 '위안부'가 당한 피해와 비교할 때 피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인 '위안부' 또한 가부장적 폭력의 동일한 희생자로 간주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의 여성운동 뿐 아니라 세계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렇게 성을 중심으로 모순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③ **계급의 문제** : 이는 '위안부' 연행/동원 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당시 조선에서 위안부를 모집했던 형태는 물리적 강제나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행위로 대표된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연행의 일차적 대상이 되었던 층은 가난한 농민층이었다.

④ **인종 차별의 문제** : 일본군은 '위안부'로 동원한 여성들 중 네덜란드 여성들에 대해서는 바타비아 군사 재판을 통해서 관련자를 처벌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백인여성에 비하여 아시아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의 면모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렇듯, 민족과 성, 계급, 인종 등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들이 많다. 또한 이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가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시 저지른 '전쟁범죄'만은 아니다. 이 문제와 연대를 하고 있는 주요단체들의 문제 의식에는 '위안부' 제도를 낳은 발상이 70년대 기생관광문제, 인신매매, 미군기지 성매매 문제 등 현재의 다른 성 문제와 연결 선상에 있다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세계여성운동의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무력갈등 하의 여성폭력(보스니아, 르완다, 구 유고, 코소보, 동티모르 등) 문제와도 연결되고 있다.

2.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 시작과 전개

1) 쟁 시작

일본군 성노예문제가 최초로 공식 폭로된 1988년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역량이 급성장하여 공권력에 의한 폭력문제가 사회화되던 시기였다. 특히 1986년 부천시 성고문 피해자 권인숙씨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하여 성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는 국가기구의 인권침해가 피해자 여성에 의해 직접 고발되는 전례를 마련하여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폭발적인 반향을 얻을 수 있었던 사회 분위기를 형성했다.

당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하 교회연)는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생관광을 장려하는 정책에 항의하며 기생관광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관광객의 70% 이상이 일본인임을 확인했으며 이는 곧 경제 침략에 의한 현대판 '정신대'라는 의식으로 이어졌다.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성매매 문제를 우려한 교회연은 세계의 기독교여성들과 함께 1988년 4월 제주도에서 '여성과 관광문화'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바로 이 세미나에서 그동안 다년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조사를 해오던 윤정옥 교수의 일본군성노예 실상에 관한 첫 강연이 이루어졌다. 국제세미나를 위한 준비답사는 그해 2월 김혜원, 김신실, 윤정옥 3인에 의해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이루어졌다. 윤정옥 교수의 강연은 이 세미나에 참여한 참가자들, 특히 일본 기독교 여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1990년 5월 22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방일 계획을 알게된 교회연과 여성단체 연합(이하 여연)과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는 정신대 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⁴⁾ 그 결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방일 중 일본군'위안부'와 강제 징용자 명단을 요구하였고, 아키히토 일왕은 과거사에 대한 애매한 사과 발언만을 남겼다. 당시 일본은 1990년 6월,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사회당 참의원이 일본 국회에서 '중군위안부'의 명단도 한국에 넘길 것인가를 물었다. 이때 답변에 나선 노동성 직업 안정국장은 일본군이 위안부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에 여성단체들이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피해자측의 지속적인 진상규명이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절감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1990년 7월 이미 '정신대연구회'는 조직되어 '위안부'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있었다.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발족, 수요시위의 시작,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① 정대협 발족 : 정대협이 발족 된 것은 1990년 11월 16일이다. 37개 여성·시민·종교·학생 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대협'은 창립부터 지금까지 아래의 7대 요구를 일본 정부를 향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1. 진상을 규명할 것
2. 전쟁범죄를 인정할 것
3. 공식 사죄할 것
4. 전범자를 처벌할 것
5. 추모비와 사료관을 건립할 것
6.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

4) "자주적이고 대등한 대일 관계를 정립" 할 것을 골자로 한 이 성명서는 여성계가 식민지 지배에 의한 민족 피해를 청산하지 못한 굴욕적 대일 외교를 비판하면서 정신대의 실상을 규명하고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한 첫 계기가 되었다.

7. 역사교과서에 기록할 것

②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 빈손으로 시작한 정대협이 교회연 사무실에서 시작한 일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는 일이었다. 1991년 7월, 교회연에 자신이 정신대 피해자임을 밝히는 첫 생존자가 찾아왔다. 일본정부가 정신대 관여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관련 자료와 증거들을 소각, 파기 은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진상조사는 생존자들의 출현과 증언을 고대할 수밖에 없었다. 67세의 김학순 할머니는 16세 때 만주 어느 군대 소속 '위안소'에서 있었던 경험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당했던 일이 하도 기가 막히고 끔찍해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 두고 살아왔지만.....국민 모두가 과거를 잊은 채 일본에 매달리는 것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할머니의 말씀이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그해 8.15 기자회견을 통해 신문과 TV에 발표되었다. 그해 12월 일본의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가 일본군이 위안부 문제에 직접 관련했다는 문서를 찾아냈다. 이 사실이 한국과 일본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같은 달 2일에 대구에서 문옥주 할머니가 나타나 증언했고, 이 때를 전후하여 국내에서 생존자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갈수록 많아지는 업무량과 국내의 단체들과의 연대, 홍보활동을 위해 정대협은 독자적인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3인의 공동대표와 기획과 국제 협력, 홍보, 재정, 생존자복지위원회 등 각 위원회를 두는 등, 활동을 전문화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었다.

③ '위안부'문제 해결운동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수요시위

1992년 1월 16일 방한한 미야자와 수상은 한국국회 연설에서 일본정부의 관여를 마지못해 시인하고 애매한 표현을 통해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 이것을 계기로 정대협은 단발성 시위로는 우리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으니,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계속할 것을 결의하고, 여성단체들과 연대하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의 맹세는 '위안부'문제 해결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 되어 9년째 이어지게 되었고, 2000년 3월 1일로 400차를 맞게 되었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처음의 약속대로 매주 수요일 12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어김없이 시작된다. 다만 1997년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제외하고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 모인 시위대는 고베, 나고야 시민들에게 시위대의 위로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시위를 대신했다. 시위의 현장에는 '위안부'할머니들이 늘 함께 한다. 이렇듯 모두의 성실한 노력으로 인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하면 곧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수요시위를 떠올릴 만큼 수요시위는 '위안부'문제 해결 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고, 시위, 집회가 갖는 고유역할인 선전, 연대의 기능 외에도 다양한 의미망, 즉 만남과 역사교육의 장, 축하와 격려의 장, 정체성 확인과 참회의 장을 포함하게 되었다.

수요시위 주최자는 정대협이며 주관 단체는 매주 바뀐다. 여성운동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대협 23개 회원 단체가 일년에 1~2회 씩 시위를 주관하며, 그 외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 연대, 경실련, 불교여성연합회, KSCF, EYC,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등 시민운동 단체와 각 대학의 여학생회와 여성운동 단위들, 고등학생 자치 단체들이 매 주 돌아가며 진행 순서와 성명서를 작성하고, 시위를 주관한다. 주관 단체의 성격에 따라, 시위 성격과 내용은 약간씩 달라지는데 이는 '위안부'문제 운동에 다양성을 더해준다.

장기간의 시위를 통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이들은 운동의 주체인 할머니들이다. 시위 초기, 대오의 가장 뒤에서 얼굴을 가리고 행인들의 눈을 피하며 수동적으로 시위에 임하던 할머니들에게는 8년 동안의 수요 시위가 여성의식과 역사의식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

는 교육의 장이며, 폐쇄적이고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할머니들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

3) 국제 활동

① 제네바 UN 인권위원회 활동

일본정부의 책임회피가 계속되자 정대협은 일본정부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국제 여성운동이나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 국제 여론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정대협은 1992년 2월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첫 번째 요청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1999년 11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4월), 유엔인권소위원회(8월)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유엔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유엔 활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서, 또한 전쟁중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의 문제로서 세계 NGO 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국제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그 중에서도 WCC(세계 교회협의회), ICJ(국제 법률가 위원회)와 같은 영향력있는 단체들이 정대협의 지속적인 유엔 활동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적극적이고 애정어린 국제 인권운동의 지원 속에서, 정대협의 ‘위안부’문제 해결운동은 유엔인권위원회와 인권소위원회에서 특별보고서의 결의안과 보고서를 통과시킴으로써 유엔 공식 문서에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영원히 기록되게 하는 성과를 보게 된 것이다.

1996년 5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조사관 보고서’는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 대한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용어의 정의, 역사적 배경 등과 함께 3개국 정부의 입장 및 도덕적 책임, 권고 등 문제 해결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에게 제시한 마지막 6개항의 권고문은 정대협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뒤이어 1998년 8월21일에 발표된 ‘게이 맥두갈 특별조사관 보고서’(유엔인권소위원회 산하 「소수자에 대한 차별방지 및 보호 소위원회」 특별 보고관 게이 맥두갈 변호사의 보고서-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 관행에 관한 특별 보고서”)는 정대협이 유엔활동을 통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위안부’문제를 ‘인권범죄’임을 강조하는 맥두갈 변호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일본정부의 논리를 반박하고, 위안부 문제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라는 법적인 근거를 밝히고, 피해자 배상과 책임자처벌을 권고하고 있다(부록5 참조).

② 비엔나 유엔 세계인권회의

유엔 활동과 더불어 두차례의 유엔 세계회의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 활동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우선,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1993년 6월 14일-25일)는 한국과 아시아의 ‘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이 국제 여성인권운동과 만나는 거점을 마련한 교두보가 되었다.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와 나란히 개최된 NGO Forum에서 정대협은 북한, 필리핀과 연대하여 아시아 여성인권협의회(Asia Women Human Rights Council)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의 전쟁범죄: 해결되지 않은 아시아 ‘위안부’문제」를 주제로 아시아 여성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이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 이름으로 성명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성명서에서는 유엔이 성노예 범죄를 조사하고 국제 상설재판소를 설치해 줄 것, 세계 인권회의가 현재의 여성인권문제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같은 과거의 문제도 다룰 것, 일본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세계 여성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의 행동 강령 중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여성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에 관한 항목으로서, “전쟁 중 여성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는 국제 인권법과 인도주의적 법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침해이다. 이러한 모든 침해는 특히 살해, 조직적 강간, 성노예, 강제 임신 등을 포함하여 특별히 효과적인 대

응과 처벌을 요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 설정된 기준은 그 후 인권위원회,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등 모든 유엔회의에서 전쟁 중 여성이 겪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다루는 결의안 등에 전문의 일부로 포함되는 기본문건이 되었다.

③ 베이징 유엔 세계여성대회

1995년 9월 4일-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정대협과 여성운동 단체들은 500명 이상 참여하여 비엔나대회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선전·홍보 활동을 펼쳤다. 1993년 10월 마닐라에서의 민간단체회의를 시발로, 1994년 6월 자카르타 각료회의, 1995년 3월의 여성지위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다듬어지게 된 이 회의의 준비과정에서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국내외로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마닐라 회의에서 결성된 동아시아 여성포럼은 여성인권분과, 평화분과 워크숍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대협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다. 또한 한국여성 NGO위원회에서 분과별 모임을 통해 작성한 NGO보고서에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여성폭력 부문에 포함되어 기술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국제활동에 있어 정대협이 큰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여성인권운동이 고조되어간 것과 때를 같이한 데 있다. 한국의 여성운동으로 시작된 정대협의 ‘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은 국제 여성운동과 만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전쟁 중 여성인권유린의 문제로 자리매김되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여성운동은 우리의 운동을 통해 여성들이 전쟁 중에 당하는 조직적, 집단적 강간이나 성노예 피해가 국제법 위반이고 전쟁범죄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깨닫게 되었다.

④ 국제노동기구(ILO) 활동

정대협이 ILO(국제 노동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5년부터이다. ILO의 규약 중 강제 노동금지조약(Convention 29) 위반으로 군‘위안부’문제를 호소할 수 있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1995년 3월 한국노총은 ILO 이사회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제기하였고, 뒤이어 일본 오사카 지역의 영어 특수학교 교사 노조에서 ILO 전문가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결과 1996년 3월 전문가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강제노동금지규약(convention 29) 위반사항으로 결론내렸다. 이러한 ILO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는 정대협으로 하여금 ILO 활동을 매진하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이후, 정대협은 ILO 활동을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ILO는 노총, 경총, 정부 삼자구도이므로 정대협 등과 같은 NGO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대협은 한국의 양대 노총과 긴밀한 협력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ILO 총회활동도 함께하여 이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노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 속에서 더욱 국제적인 이슈로 확장되어갔다.

ILO 전문가 위원회는 1996년 3월, 1997년 3월, 1999년 3월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강제노동금지규약 위반이며, 하루 빨리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1999년 보고서는 일본정부가 시간이 더 늦기 전에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일본의 국민기금은 배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정대협의 ILO 활동은 한국의 노조와의 연대 뿐 아니라 일본의 여러 노조와의 연대를 형성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강제 징용 및 징병 문제에 관한 노동조합의 관심과 활동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강제 성적 노동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국제 노동기구의 권위있는 법률적 판단을 이끌어 내어 일본정부에게 국제적인 압력을 주었다.(부록5 참조)

4) 아시아 연대활동

정대협은 운동단체로서 출발한 초기부터 아시아 피해국이 연대하여 일본을 향해 공동전선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아시아 피해국가들은 필연적으로 문제 해결 운동을 위한 연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유엔 등에서 잦은 만남을 갖게 된 피해국의 단체들은 각국의 정보와 운동과제들을 공유하는 한편, 아시아 연대회의를 통해 정기적, 비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

① 일본 내 인권 운동단체들의 '위안부'문제 해결 운동

1990년 12월 일본의 매매춘을 생각하는 회, 기독교교풍회와 YWCA 등은 윤정옥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부터 일본 YWCA, 교회협의회(JNCC)여성위원회, 기독교교풍회, 일본부인회, 재일 동포 여성들의 단체인 '우리여성네트워크' 등 17개 단체들이 '행동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정대협과 연대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정신대신고 전화 설치를 위시하여 강연회, 연구회, 영화 상영 등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1992년 8월에는 평화운동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후 책임을 생각하는 시민집회' 등에서 전쟁책임을 국회에서 결의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제의하기도 했다. 서명운동은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의 넓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전 '위안부'할머니들의 증언과 정대협 관계자들의 강연이 일본 각지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지원한 이 운동은 많은 일본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총 4만명이 '위안부'문제해결운동을 지지하는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서명철은 이후 일본 정부에 제출되었다.

이렇듯 긴밀하게 연관되어 온 한일간의 연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대표적 성과는 1998년 4월 27일 일본에서 있었던 시모노세끼 재판 판결이다. 시모노세끼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위안부'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은 3명의 위안부 여성에게 일본이 이에 대한 입법의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금 30만엔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일본정부에 대해 "군'위안부'제도는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차별이며,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 극복해야 할 근원적인 인권문제"라고 명시하였다. 마침내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가해국 일본국내에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범죄로서 판명된 것이다. 시모노세끼 판결은 일본국가 기관이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법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일본정부를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투쟁해 온 각국의 운동단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현재 1심인 시모노세끼 재판은 2심인 히로시마 재판에 계류중에 있다.

현재 정대협과 활발한 연대를 갖고 있는 단체는 전후보상실현 캠페인(ICR)과 바우넷제팬(VAWW-NET Japan), 전쟁·여성·인권학회, 매매춘 문제를 생각하는 회, 조선인종군위안부를 생각하는 모임, 일본 YWCA, 교회협의회(JNCC)여성위원회, 기독교교풍회, 일본부인회, 송신도할머니를 지지하는 회 등 약 24개 단체 등이다.

② 아시아 연대회의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피해국들과, 가해국의 양심적인 여성, 인권 단체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연대회의'는 1992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아시아 피해국들이 서로의 정보와 활동을 교류하며 함께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의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제 1차 아시아 연대회의는 1992년 8월 10일 - 11일 양일간, 정대협의 주최로 서울 수유리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렸다. 한국, 필리핀, 일본, 대만, 4개국이 참가한 이 첫 번째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가부장제와 군국주의

전쟁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예며,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이야말로 전쟁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공유하였다.

제 2차 아시아연대회의는 1993년 10월 20일 - 10월 25일 5박6일의 긴 일정으로, 가해국인 일본 구니타치부인 교육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의 강제 중군 위안부 행동 네트워크가 주최한 이 회의에는 한국, 북한, 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이 참가하여 '위안부'문제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해결 의지가 더욱 고조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지난 1년간 각국의 '위안부' 문제해결운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했다.

2년 뒤 열린 제 3차 아시아연대회의는 1995년 2월 26일 - 28일, 다시 서울의 여전도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전후5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를 주제로 열린 3차 회의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위안부'문제 해결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운동의 진행상황들을 점검하는 동시에, 운동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1995년,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 활동이 구체화되기 시작할 때 위기감을 느낀 아시아 각국은 1996년 3월 27일-30일, 필리핀 마닐라 베이뷰 호텔에서 4차 아시아연대회의를 소집했다. "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은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책이 될수 없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 회의는 필리핀의 릴라 필리피나(Lila Philipina)가 주최한 회의로서,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 일본, 필리핀의 대표들이 참가했으며, 국민기금에 의한 분열책에 대항하는 강한 결속을 다졌다.

1998년 4월 15일 - 17일, 서울의 한강호텔에서 열린 제 5차 아시아 연대회의는 4차 회의의 결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더욱 강한 연대와 화합의 장이었다.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로 모인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5개국의 대표들은 일본의 '아시아 여성을 위한 평화 국민기금' 해체를 촉구하였다. 이 문제가 오직 일본정부의 배상과 사죄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아시아 피해국과 일본시민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함께하기로 결의했다. 이 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 공식 제안되기도 했다.

5)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반대 운동의 전개

1994년 8월15일 일본정부는 패전 50년을 맞이하여 당시 일본수상이었던 무라야마가 담화를 발표했다. 이것은 일본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틀로써, 담화의 주된 내용은 가해의 대상이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사과나 반성이었다. 결국 무라야마 담화는 구체적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정부의 분명한 태도 표시인 셈이었다.

이 담화를 기점으로,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보상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단락 되었다는 전제하에, 정부재원에 의한 개인보상은 배제한 채 소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설치를 통해 국민에게서 거둔 위로금 200만엔, 정부 국고에서 나오는 의료금 300만엔과 총리 개인의 사과문을 피해자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모색했다.

'무라야마담화'에서 비롯되어 성사된 '국민기금'은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대협에게 3년 여의 세월동안 힘겨운 투쟁을 하게 했다. "국민과 정부가 협력하여 보상을"이라는 구호를 내건 '국민기금'은 두 가지 의미로 국가 범죄로서의 '위안부'문제의 범죄성을 은폐하는 것이었다.

첫째, '국민기금'은 운동의 주체인 할머니들을 연민의 대상, 자선금의 수혜자로 전락시키며 다시 한번 더 인권침해를 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국민기금'은 맹렬한 분열공작을 통해

정대협과 피해자, 피해자와 피해자 사이 등을 분열시켜왔다. 둘째, '국민기금'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국가범죄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국중심주의, 제국주의사상의 구체적 표현이라는 점이다.

이후 3년여의 정대협 투쟁은 국민기금의 본질을 폭로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국민기금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에 집중되었다. 결국, 국민기금을 거부하는 많은 할머니들의 의지와, 정대협을 비롯한 국내, 국외 단체의 국민기금 저지운동을 통해 국민기금은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1997년 국민기금이 극비리에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국민기금을 건넬 때 받은 할머니는 7명이었다. 이때 정부에 등록된 할머니 피해자 수는 155명이었다.

6) 대(對) 한국정부의 활동과 입법활동

정대협은 초기부터 한국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일본정부에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도록 촉구해왔다. 동시에 한국정부 스스로도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해서 한국교과서에도 조사된 바를 올리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한국정부는 1991년 7월 정신대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1993년 5월 생존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그해 8월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접수담당 창구 마련, 피해자 개인에 대해 일시불 500만원과 월 15만원의 생계비 지원(현재 월 5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였다. 이 외에도 할머니들이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을 통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998년 4월 21일 일본의 국민기금을 저지하기 위해 정대협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지원금 3150만원을 한국 정부차원에서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1997년 11월 18일에는 '국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모임' 회원(대표: 이미경 의원,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8인이 공동 발의한 '출입국 관리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제시 또는 연락 하에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자에 관한 출입국을 금지한다"이다.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 의결됨으로써 일체의 최대의 피해국인 우리 나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731부대 생체실험, 학살, 고문, 강제노동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전범에 대한 출입국금지가 가능해졌다. 이뿐 아니라 세계곳곳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전범들에 대한 국내입국도 금지되었다. 그간 시행령과 전범자 명단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안에 불과했으나, 최근 법무부에서 시행령에 대한 의지를 밝혀 조만간 이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7) 남북의 만남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남북 여성들이 화해를 이루며 민족 동질성을 확인하려는 첫 만남에 서부터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1991년 5월 31-6월 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 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만난 남북여성과 일본 여성들은 1992년 5월 2일 제 3차 평양토론회에서 남북여성이 함께할 주제로서 '위안부'문제를 선택했다. '위안부'문제의 해결 없이 식민지 지배의 청산과 자주성 회복이 이루어 질 수 없음을 공감했던 것이다.

북한은 1992년 5월 '중군위안부'문제의 전면적 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정부 관계자들과 역사학자, 국제법학자, 인권문제 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조선강점 피해 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조사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어, 1992년 2월 제 6차 고위급 회담 때는 식민지 지배하의 민족 피해에

대한 공동대응책을 협의하자고 제의했으며, 그해 3월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 공동위원회 구성을, 6월에는 이에 관한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의하기도 했다. 국제적 민간단체들과의 연대 활동을 중요시하는 한편 일본정부를 상대로 남북 정부의 공동대응을 촉구해 온 북한 정부의 태도는 1965년 한일협정에 구속당한 채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외교적 현안으로 삼지 않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취해 온 남한 정부와 대조를 이룬다.

남북의 생존자 할머니들이 처음으로 서로 대면하고 함께 성노예의 범죄성을 고발하는 계기는 1992년 12월 9일 도쿄에서 마련되었다. 일본 민간단체들이 주최한 '일본의 전후 보상에 관한 국제 공청회'에 필리핀, 중국, 대만, 네덜란드의 피해자들과 함께 증언자로 초대된 것이다. 남의 강순애 할머니, 북의 김영실 할머니의 증언은 고통과 분노의 울부짖음으로 폭발하여 국제회의장을 뒤흔들었다. 이 당시 남의 황금주, 김학순 할머니가 북의 할머니를 끌어안고 통곡했던 사건은 분단과 '위안부'의 고통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남북 여성들은 이렇게 식민지 지배의 청산과 배상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비엔나 유엔인권대회(1993년 6월)와 독일 베를린의 '전쟁과 여성문제'에 관한 국제회의(1993년 9월)에 공동으로 참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반인도적 죄악을 폭로했다.

1993년 11월에 북한은 '일본의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국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대협 의 이호재 교수, 윤정옥 교수(당시 공동대표)를 초대했다. 당시는 북한의 NPT 탈퇴 위협과 핵 문제로 인한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원은 정대협 공동대표의 참석을 허용했으며, 이는 비록 제 3국을 통한 평양행이었지만 민간인으로서 정부수행원이 동반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되었다. 평양 토론회에 참가한 일본 참가자들은 우리와 함께 진상조사, 자료 공개, 사죄, 배상 등을 포함 성실한 전후처리 배상을 이행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분단극복과 민족 통일의 과제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정립과 떼어놓을 수 없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위시한 식민지 지배의 청산과 전후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조약 체결로 은폐 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이 이것을 폭로하는 민족 운동으로서 기여해 온 것은 다행한 일이다. 더욱이, 남북 여성들은 이 운동을 통해 생존자들의 한 맺힌 폭로와 고발을 국제적으로 함께 제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분단 속에 형성된 이질감을 극복해 가는 좋은 예를 제시했다.

물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의 만남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다. 1995년과 1998년 서울에서 열렸던 3차, 5차 아시아 연대회의에서는 북한대표들을 공식 초청하였으나 끝내 불참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1998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일 여성회담은 일본군'위안부'문제만을 주제로 한 남북 여성들의 첫 번째 만남이었으며,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었다. 남북의 대표들은 이 회담에서 '위안부'문제 해결에서는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남북 공동으로 일본정부를 향해 배상운동을 함께 전개하기로 하고 유엔에 보내는 편지와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항의문을 채택하였다.

3. 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은 지금

1) 할머니들의 현황

전쟁이 끝난 후 일본군성노예 여성들은 사살되거나 자결을 강요당하거나 현지에 버려진 경우가 많다. 운 좋게 생존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소외와 수치심, 가난, 병약해진 몸으로 인해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야 했다. 이들의 경제상태는 매우 열악했다. 대부분 가정환경이 열악했던 이들은 일본군'위안부'였다는 과거로 인해 소외와 빈곤으로 살아야했다. 많은 할머니들이 결혼을 하지 못했고, 결혼을 했더라도 과거가 밝혀져 파혼을 당했다. 후처로 들어갔다가 남편 사망 후에는 전처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혼자 살아가는 할머니들도 많다. 일본군'위안부'라는 경험은 귀환 후의 할머니들에게 은갖 병과 피해 의식 등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가져왔다. 일본의 전쟁 책임 회피와 함께 할머니들을 의면해 온 조국의 보이지 않는 폭력 속에서 할머니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갔던 것이다.

정대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하고 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신고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달아 현재까지 총 194명의 피해자들이 신고하였고, 1999년 12월 28일 현재 147명의 피해자가 생존해있다. 그리고 그동안 돌아가신 분들은 총 47명이며, 1999년 한해동안 돌아가신 분이 10명이다.

정대협이 발족할 당시만 하더라도 할머니의 생활형편은 너무도 어려웠다. 어떤 할머니는 비닐 하우스일을 하면서 고압전기가 흐르고 있는 물탱크가 들어 있는 헛간 안에 살고 있었다. 하도 딱해서 동네 청년들이 방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나마 곧 철거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할머니는 매일 새마을 취로사업에 나가서 일을 하지만 올라가는 월세와 물가를 따라 잠을 수 없어 살길이 막막하다고 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위안부'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 힘들지만 큰돈이 없으니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 보험 카드로 병원에서 약이나 타서 진통을 견뎌 간다는 것이다. 정대협은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생존자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해 왔다.

2) 할머니 복지 활동 : 생판짜 복지 사업과 한글 수업, 그림 수업

정대협 생존자복지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위와 같이 생계에 불편을 겪으며 이웃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병원 알선, 주택문제, 장례 절차, 위로 행사, 교회 및 지역 사회단체와 할머니들과의 자매 결연 등을 추진하였다.

그중에서도 의료 지원사업은 할머니들이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받게되는 사업이다. 많은 할머니들이 입원비 보조와 위로비를 지급받았으며, 1995년부터 아산재단 서울 중앙병원을 비롯, 아산재단 산하 전국 9개 병원에서 무료진료카드를 배부받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으며, 매년 가을 독감예방 접종과 무료 진료도 실시하고 있다. 천호한의원, 해모수 치과도 할머니들에게 무료진료를 담당했었다.

정대협은 또한 1992년 5월 2일 첫 위로행사를 시작으로, 여러단체의 후원하에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실시해왔다. 회원 및 관련 단체인 교회여성연합회, 여성교회, 불교인권위원회 또한 지속적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위로 행사를 실시해왔다. 할머니들의 장례 절차 또한 정대협 생존자복지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장례 절차 상담 및 위로금 지급, 노제 등을 진행해 왔다.

한편, 정대협의 회원단체 중 하나였던 불교 인권위원회 여성위원회는 1992년 6월 22일 오갈 데 없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생활터전인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계종

승려 혜진을 중심으로 불교도들과 뜻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모금액으로 총 2억여원이 모였고, 땅을 기증받기도 했다. 그리고 1992년 10월 31일, 당장 거처가 필요한 할머니들을 위해 서교동에 '나눔의 집'을 마련했다. 처음 6명의 할머니들이 입주했다. 현재 나눔의 집은 혜화동을 거쳐 경기도 광주에 자리잡아 9명의 할머니들이 살고 있다. 이후 '나눔의 집'은 사업이 확장되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세워져 교육장 역할을 하고 있다.

나눔의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그림 교실, 한글교실, 수지침교실이 운영되었는데, 그림 교실의 경우 할머니들이 일본군 '위안부' 시절의 아픈 이야기를 그린 그림 30여점이 일본과 국내외에 전시회를 통해 공개되어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했다.

이 외에 '광야기획'이라는 기독교 복음사가 가수들은 '100교회 순회콘서트'를 계획했다. 1995년 후반부터 1997년까지 진행된 이 콘서트에서는, 노래 뿐 아니라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슬라이드를 상영했다. 이 행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통한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한 계기가 되었다.

3) 할머니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각계의 활동 : 한국정부의 지원, 시민모금, 정대협부원

위와 같은 생존자 복지활동은 아무래도 심각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는 할머니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대협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 구호 조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결과 1992년 12월 <정신대 할머니 생활 기금 모금 국민운동 본부>를 발족하여 범국민적으로 1억 5,000만원을 전개하여 1993년 7월 할머니 26명에게 25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첫 번째 모금운동에 이어 2차로 진행된 정신대 할머니 돕기 모금운동은 일본의 국민기금을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법적 배상을 회피하는 국민기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대 할머니는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강제연행 당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지키기 시민연대>를 결성하였다. 그 결과 1996년 10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전국민보금을 시행하여 155명의 생존자에서 3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국민기금이 피해자들에게 비밀리 지급하는 등 여전히 위로금 지급을 강행하자, 정부의 후원으로 3차 모금을 시작하였다. 1997년 10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모금운동은 1998년까지 60억원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IMF 한파로 목표액 60억 달성이 어렵게 되자, 정대협은 김대중 정부에게 나머지 잔여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1998년 5월 정부차원에서 1인당 3,150만원을 지급하였고, 정대협은 3차 모금분 410만 8천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모금의 목적이 국민기금을 받지 않는데 있던 만큼 국민기금을 받은 일부 할머니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대협은 국민기금을 저지하기 위한 모금액 총 3,910만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일본 국민기금과의 싸움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 성격을 단순생활지원금이라고 규정하였다. 정부의 이같은 의도는 위로금 차원인 국민기금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되, 한일관계를 고려하여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사죄만을 요구하는 차원에 머물겠다는 소극적인 입장 표시하였다. 한국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미 대만에서 시행한 '선 보상 후 청구'의 형식보다 훨씬 미약한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한국정부의 배상 요구를 주장하는 정대협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4. 2000년을 맞이하는 정대협운동

1)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① 2000년 법정이란 무엇인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이제까지 가장 불충분한 것이 책임자 처벌문제이다. 1990년 이래 정대협에서는 진상규명, 사죄 등과 같은 6개 항목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왔다. 또한 각국의 피해자들은 ‘책임자의 처벌 없이 빼앗긴 명예의 회복은 없다’고 계속 호소해왔으며, 누가 책임자였는가를 밝히는 진상규명활동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상시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시화하고 있는 유엔은, 안타깝게도 과거의 전쟁범죄 처벌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위안부’ 관련범죄는 여전히 취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45년의 도쿄재판에서 제 2차 세계대전시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가 어느정도 밝혀졌으나, ‘위안부’ 문제는 취급조차 되지 않았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이하 2000년 법정)’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하였다. 즉, 2000년 법정을 통해 도쿄재판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각국에서 이루어진 전범재판을 재검토하고, 여성의 힘, NGO의 힘으로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일본이 저지른 인권침해와 전쟁범죄자를 처벌하는 시민들의 법정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2000년 법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시아피해국인 한국, 북한, 대만,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주최하고, 세계의 여성, 인권단체들이 지원하는 2000년 법정은 2000년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 2000년 법정은 7명의 판사단과 9명의 각국 검사단, 각국의 피해국을 대표하는 원고단(각국 2명), 각 영역을 대표하는 4명의 전문가 증인단으로 구성된다.

2000년 법정을 위한 조직은 다음과 같다 공동대표 : 윤정옥(한국), 마쯔이 야요리(일본), 인다이 사호트(필리핀), 범률자문단 : 반보벤(네덜란드), 론다코플론(미국), 국제자문단: 샬롯 번치(미국), 플로렌스 부타구와(우간다), 마리메 루카스(알제리) 등, 사무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 바우넷 제펜(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인권센터(ASCENT, 필리핀)이 맡고 있다.

2000년 법정은 일본군‘위안부’제도와 관련한 일본정부(일본군)의 국가적 책임과 전범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2000년 법정은 주요 쟁점이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성립과 강제 연행, 그리고 위안소에서 의 삶, 패전 이후 할머니들의 침묵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제기 이후를 중심으로 맞춰질 것이며, 각국의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책임자를 규명하고 인권법정을 통해 법적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의 비도덕성을 만방에 알리게 할 것이다.

③ 한국위원회 활동

한국은 정대협을 비롯하여 운동단체, 법률가 등 40여명으로 한국위원회가 구성되어 7개 위원회(법률, 진상규명, 기획홍보, 재정, 문화, 지역, 학생법정)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법률위원회는 2000년 법정의 법률적인 틀을 구성하고 있으며, 진상규명위원회는 가해자 선정,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국내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 채록, 해외 현지 조사, 국내외의 공문서 기록 보존소 등 문서자료 조사,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각종 영역의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 기획홍보위원회는 재정위원회와 함께 국내 모금 운동, 운동의 확산을 위한 전국민

캠페인 등을 기획하고 있다. 문화위원회는 지역위원회와 함께 문화활동을 통해 전국적인 홍보와 2000년 법정 기간 내 각종 이벤트를 구성하고 있다. 학생법정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청년의 힘으로!”라는 구호 아래, 2000년 4월 학생법정을 준비하고 있다.

④ 2000년 법정의 의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은 구 유고 슬라비아, 동티모르, 보스니아 사태에서 드러나듯, 무력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만연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법정은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지금의 국가 사회에서는 무력 갈등이 없을 수 없고 그 때마다 생기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강하게 경고하기 위한 재판이기도 하다.

2000년 법정은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성인권을 짓밟았던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또 다시 무력갈등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본군성노예 제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본은 보여주고자 함이다.

2) 교육관 사업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과 역사교육이라는 인식이 그간의 운동 과정에서 자리잡게 되었다. 정대협을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 학생들을 수용하고 ‘위안부’문제를 함께 논의할 교육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미 정대협은 창립 초기부터 사료관 건립을 위한 꿈을 키웠고, 이를 위해 수많은 분들이 모금과 후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료관 형태로 독자적인 건물을 마련하기는 역부족이어서, 우선 정대협이 세들어 있는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3층을 사용하여 교육관을 마련하였다. 현재 정대협 교육관은 ‘여성과 전쟁’ 사료관의 건립의 1차 단계로서, 여성인권과 역사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① 교육관의 구성

교육전시실·할머니 쉼터·자료실로 마련된 정대협 교육관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은 군‘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여성인권문제,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류, 보관하고 있다. 연구논문이나 자료 뿐 아니라 비디오, 사진, 슬라이드 등 영상매체도 수집하여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이나 운동가들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

2) 교육전시실은 3-40명 정도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다. 전시실은 정대협 운동사진이나 역사사진, 그리고 할머니 유품 등을 전시하며, 영상시설을 통해 비디오나 슬라이드 상영이 가능하다. 체계적인 교육관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다.

3) 할머니 쉼터는 할머니들 대부분이 다리와 허리가 아프신 상태에서 뜨끈뜨끈한 온돌에 쉬다 가시게 하기 위해 온돌을 마련했다. 이 쉼터에서 할머니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② 교육내용: 기획교육과 방문자 교육

정대협 교육관의 교육과정은 크게 ‘기획교육’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자교육’으로 나뉘어 있다. 기획교육은 각계각층, 즉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시민단체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내용은 할머니 증언이나 정대협 운동에 관한 비디오 영상물 시청,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운동에 관한 강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상에 따라 여성인권을 중심으로 한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시민단체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심화세미나는 현재 세계의 정세나 향후 운동방향 등 워크샵 형태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2002년 교과서개정에 맞추어 역사교과서 개정을 촉구하는 워크샵도 실시했다.

방문자교육은 정대협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미리 연락을 하는게 가장 중요한 절차중의 하나이다. 방문교육은 방문대상에 따라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전쟁과 여성인권센터(가칭) 건립 계획

정대협은 향후 교육관 운영을 통한 국내운동의 기반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2000년 법정'을 계기로 여권, 인권 교육뿐 아니라 자연과의 공생교육을 해나갈 전망이다. 물론 앞으로 도 지금까지 해왔던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의 활동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강도 있게 요구할 것이다.

할머니들이 한분 한분 돌아가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후세들을 위한 역사교육이다. 올바른 역사교육만이 우리 할머니들의 뒤를 이어 이 운동에 투신할 후세들을 기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정대협 교육관은 향후 '전쟁과 여성인권'센터로 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계여성운동의 국제적 이슈는 무력갈등 하의 여성폭력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해왔던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위안부 문제를 현재에 이르는 무력갈등 하의 여성폭력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전쟁과 여성인권센터는 담당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적으로 한국전쟁, 4.3, 5.18 등 한국에서 일어났던 무력갈등 하의 여성폭력도 종합적으로 전망할 예정이다. 이로써 '위안부'문제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연결망을 구축하여 보다 종합적인 연구체제와 운동체제를 구축할 전망이다.

부록 1. 정대협과 함께하는 단체들

1. 회원단체 소개 (가나다순)

경남정신대문제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

TEL)011-572-1732 FAX)0551-250-0180,1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TEL) 792-9629 FAX) 796-5047

기독교대한감리회여성교회전국연합회

TEL)399-2080 FAX)399-2079

기독교여민회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Women for Women Minjung)

TEL)265-7957 FAX) 263-8090

<http://www.maria.peacenet.or.kr>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Korea Catholic Women's Community for a New World)

TEL) 747-2442 FAX) 747-2447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Asian Christian Women's Institute for Culture and Theology)

TEL) 312-2302 FAX)312-2303

E-mail) feminist@peacenet.or.kr

여성교회 (Women Church)

TEL) 2266-1850 FAX) 2263-2048

천리안 WOWC

이화민주동우회

TEL/FAX)921-3890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협의회(Women Ministers Association)

TEL) 925-5484 FAX) 928-1765

존타(ZONTA)

TEL)920-6346(오영숙) FAX)927-7220

카톨릭여성복지위원회

TEL) 913-5319 011-707-5319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Women Making Peace)

TEL) 2275-4860 FAX)2275-4861

E-mail) wmp@chollian.net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Korea Women's Hot Line)

대표전화2269-2962 FAX)2237-1028
천리안/하이텔 KWHL

한국교회여성연합회(Korea Church Women United)
TEL)708-4181.2 FAX)708-4186
<http://maria.peacenet.or.kr>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TEL) 745-4143 FAX) 744-6189
<http://www.kncc.or.kr>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Women Ministers Association of PROK)
TEL)362-9619 FAX)744-7019
천리안 wmap7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National Church Women's Associa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TEL)708-4033 FAX)708-4034

한국대학원생대표자협의회
TEL) 961-0125(경희대 사무국장) FAX) 961-0138
천리안 khga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TEL)2273-9535 FAX)2273-9539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민우회 (Korea Women's Association for Democracy and Sisterhood)
TEL) 737-5763 FAX) 736-5766
E-mail) conf@womenlik.or.kr
<http://www.womenlink.or.kr>

한국여신학자협의회 (Korea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TEL)2275-7754 2278-5260 FAX)2269-0670
<http://www.womanist.or.kr>

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Association of Major Superiors of Religious Women in Korea)
TEL) 757-8941 FAX) 775-7539

한국정신대연구소(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hongShinDae)
TEL) 814-9207 FAX) 814-9211
Home Page) <http://truth.bora.net>
E-mail) RCSD2659@chollian.net

2.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대단체들

1) 국내 관련단체들

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 퇴촌면에 위치하여 9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함께 사는 보금자리.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함께있다.

TEL) 0347-768-0064 FAX)0347-768-0814

E-mail) Y365@chollian.net

한국정신대연구소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주로 하며, 할머니 증언을 채록하여 증언집을 출판하고 있다.

TEL) 814-9207 FAX) 814-9211

E-mail) RCSD2659@chollian.net

정신대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구에서 피해자인 할머니들과 함께 활동하는 운동단체로, 피해자할머니 증언조사 및 간병활동을 하고 있다.

TEL/FAX) 053-257-1431

E-mail) TG-HALMAE@Hanmail.net

경남 정신대문제 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

마산에서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모임으로 중국조사와 함께 피해자증언활동을 하고 있다.

TEL)011-572-1732 FAX)0551-250-0180,1

기록영화제작소 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들을 주제로 <낮은목소리><낮은 목소리2><숨결>등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TEL)597-5364 FAX)597-5365

E-mail) cameye@chollian.net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서울지부)

태평양전쟁 시기 강제징용, 강제징병을 당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단체이다.

Tel) 747-8863, Fax) 3673-2270

2) 외국의 관련단체들

① 미국

워싱턴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 (Washington Coalition for the Comfort Women)

워싱턴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미국내의 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Tel)1-703-356-5151 FAX)1-703-356-1525

E-mail) wccw@comfortwomen.org

Home Page) http://www.comfortwomen.org

② 독일

재독 한국여성모임 (Koreanische Fraueugruppe im Deubchland)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여성의 권익을 위한 활동, 특별히 '위안부'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결성된 모임이다.

TEL) 49-30-803-11-15, Fax)49-30-69-60-61

③ 캐나다

토론토 정대협 지부

캐나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대협 지부이다.

TEL/FAX) 416-925-8241

3) 아시아 피해국의 관련단체들

① 북한 :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조사대책위원회

위안부문제만이 아니라 강제징용, 징병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단체이다.

② 대만 : 태북시부녀구제사회복지금회(Taipei Women's Resene Foundation)

대만의 타이페이에 있으며 위안부를 위한 복지활동과 여성인권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TEL) 866-2-2700-9595 FAX) 866-2-2704-4854

E-mail) twr95@ms4.hinet.net

③ 필리핀 :

말라야 로라스(MALAYA LOLAS)

1996년 조직된 여성인권단체로서 위안부문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Telefax) 632-928-4973 E-mail) ascent@mnl.cyberspace.com.ph

리라 필리피나(LILA-PILIPINA)

2차 대전 중 일본군에 의한 강간과 성적노예의 필리핀 희생자들의 조직이다.

TEL)632-924-6381, 928-8034 FAX)632-6406

④ 중국 : 상해위안부 연구센터

상해에 있는 중국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이다.

TEL) 86-21-62572474 FAX) 86-21-6257105

⑤ 인도네시아: LBH Jakarta Legal Aid Institute

자카르타에 있는 변호사단체로서 인도네시아의 '위안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TEL) 021-390-4266

4) 일본의 관련단체들

① VAWW-NET Japan(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Network Japan)

Tel/Fax) 81-3-5337-4088

E-mail) vaww-net-japan@jca.ax.apc.org

② ICR(international Campaign for Redress)

TEL) 81-3-3237-0287 FAX) 81-3-3237-0217

E-mail) cfrtyo@aol.com

③ 전후책임을 묻는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회 /TEL) 03-3262-4971

④ 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 /TEL) 03-3262-4971

⑤ 「여성·전쟁·인권」학회 /TEL) 06-721-2332

⑥ 일본기독교 교토구 성차별문제 특설 문제위원회 /TEL) 03-3202-0541

⑦ 일본기독교단 성차별문제특별위원회 /TEL) 075-451-3556

⑧ 제일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 회 /TEL) 0422-41-0251

⑨ 나눔의 집 기념관후원회 동경사무국 /TEL) 047-389-8880

⑩ 성(性)을 말하는 회 /TEL) 03-3708-7326

⑪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TEL) 03-3203-0372

⑫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회(후쿠야마) /TEL)0849-24-2235

⑬ 관서지방교회여성연합회 /TEL)06-731-3939

⑭ 아시아여성자료센터 /TEL)03-3780-5245

부록2. 정대협 연혁

- 1970-80 윤정옥 선생,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안부 자료수집 및 위안소 지역 관련 답사
1988.4.21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국제세미나 '여성과 관광문화'에서 윤정옥 선생 정신대
답사 보고
1988.7.20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속에 정신대연구위원회 설치

<1990>

- 1990.1 한겨레신문에 윤정옥 선생의 정신대답사기 연재
1990.5.18 노태우 대통령 방일에 즈음하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한
국여성단체연합이 연명으로 일본정부에게 진상규명과 사죄 요구
1990.7.10 정신대연구회 조직
1990.10.17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37개 여성단체가 일본, 한국 양 정부에
게 공개서한 발송
1990.11.16 37개 여성단체와 개인이 모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결성

<1991>

- 1991.1.8 가이후 일본수상 방한에 즈음한 성명서 발표, 탑골공원에서 종로1가까지 시위
1991.4.1 일본 모토오카 쇼지 의원 질의에, 일본 노동성 국장은 일본정부가 관여하지 않
았다고 답변
1991.5.18 일본 오사카에서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발족
1991.7.18 정대협, 한국국회에 '위안부'문제에 관한 6항목 청구사항 협력요청 청원
1991.8.14 한국 최초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67세) 기자회견
1991.9.18 정신대 신고전화 개통식
1991.12.6 김학순 할머니 등 3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소

<1992>

- 1992.1.8 정대협,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회 수요정기시위 시작
1992.1.10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통제 등에 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일 방위청 도
서실에서 발견
1992.2.29 당시 정신대 신고건수 위안부 70명(생존자 41명), 근로정신대 90명(생존자 70명)
1992.3.4 유엔인권위원회에 정신대 문제 관련호소문과 자료문건 발송
1992.3.7 정대협, 유엔인권위원회에 정신대문제 상정 보고 기자회견
1992.8.10 서울에서 제1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대만, 필리핀 등 6개국 참가)
1992.12.1 정신대할머니 생활기금모금 국민운동본부 발족

<1993>

- 1993.4.21 나눔의 집 건립을 위한 서화전
1993.7.5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공청회 개최
1993.7.15 정대협,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시민단체들과 함께 연명으로 일본의 유엔안전보
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하는 아시아연대성명서 발표

1993.8.4 일본정부, '위안부'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 일본정부의 직간접 간여를 시인하는 고노 관방장관 담화

1993.10.21 도쿄에서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1994>

1994.2.7 일본 검찰에 위안부 문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 고발장 전달

1994.4 유엔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으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임명

1994.6.2 정대협, PCA(국제상설중재재판소) 제소를 위한 한일회의를 위해 일본방문

1994.9.2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위안부 문제에 관한 권고안 발표

<1995>

1995.2.9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정대협 주관으로,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1995.2.27 서울에서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강덕경 할머니, 김순덕 할머니 그림전시회)

1995.3 한국노총, ILO에 대해 위안부 문제는 강제노동조약 위반임을 요구하는 요청서 발송

1995.4.22 할머니를 다룬 영화, '낮은 목소리'(보임 제작) 발표

1995.6.14 일본정부, 법적 배상을 회피하는 민간차원의 위로금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 발기인 발표

1995.8.14 경기도 광주에 나눔의 집 기공식

1995.8.22 정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제3회 시민인권상 수상

1995.8. 북경세계여성대회시 행동강령에 위안부문제 포함

1995.12.3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민기금 반대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1996>

1996.1.24 200차 수요정기 시위

1996.1. 한국정부,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지급

1996.3.4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 위안부문제는 강제노동금지 조약에 해당됨을 발표

1996.3.27 필리핀에서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1996.4.8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문제를 다룬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채택

1996.10.4, 할머니 29명의 연명으로 일본 하시모토 수상 앞으로 일본정부의 직접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편지 발송

1996.10.18 일본국민기금을 반대하는 '강제연행당한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대 결성, 국내모금 시작

1996.12.3 미국 법무성, 제2차 세계대전 중 731부대와 '위안부' 정책에 관여한 16명의 일본인 전범 입국금지 조치 발표

<1997>

1997.1.11 일본 국민기금, 한국의 피해자 7명에게 지급강행

1997.2.27 '일본 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세미나 개최

1997.3.1 시민연대, 서명모금과 함께 독립공원에서 할머니 은거레 돕기 모금공연

- 1997.8.25 정신대할머니 돕기 2차 모금 시작
- 1997.11.18 한국국회, 일본전범의 출입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 1997.12.16 최초의 증언자 김학순 할머니 별세(99.2월 현재 약 40여분 돌아가심)

<1998>

- 1998.2.18 제300차 수요시위
- 1998.2.24 전범 나카소네 대통령 취임식 참가 반대 시위
- 1998.4.15 서울에서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2000년 법정)을 열기로 결정
- 1998.4.27 일본사법부 사상 최초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3명에게 손해배상 인정하는 시모노세끼 판결
- 1998.5.7 한국정부,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금 3150만원 지급(정대협 2차모금 410만8천원 별도 지급)
- 1998.8.10 유엔인권소위원회, 부록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게이 맥두걸 보고서 채택
- 1998.9.30 김대중 대통령방일에 따른 한일연대회의 개최, 한일공동성명서 발표
- 1998.10.7 김대중 대통령, 일본의 월간잡지 '세계'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국민기금 반대입장 표명
- 1998.10.8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일 베이징 3자회담 개최
- 1998.12.7 2000년 법정을 위한 한국위원회 발족
- 1998.12.30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회

<1999>

- 1999.3.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교육관 개관식
- 1999.3 ILO 전문가위원회에서 일본정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배상 권고
- 1999.3.20 일본 오부치수상 방한에 따른 한일시민연대 결의대회
- 1999.6.1-5 ILO 총회 참석(기준적용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회의록에 공식기재)
- 1999.6.4-5 유엔인권소위원회특별보고관 게이맥두걸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 1999.6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이크 혼다결의안 채택(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즉각적 배상을 촉구)
- 1999.8.10 제 51차 유엔인권소위원회 회의 참석
- 1999.9 11월에 있을 ILO 전문가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한국노총,민주노총,정대협,유족회)
- 1999.9.27 2000년 법정 학생법정 준비위원회 발족식
- 1999.10.1-2 2000년법정 도쿄 국제실행위원회
- 1999.10.11-15 99세계NGO대회 참가-NGO성공사례 포럼
- 1999.10.15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3' 출간
- 1999.12.22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위한 추모회

부록8. 관련 도서 소개

-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진상』, 역사비평사, 1997.
-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연구소 편, 『증언집-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출판사, 1993
- 3) _____, 『증언집-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출판사, 1997.
- 4) _____, 『증언집-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출판사, 1999.
- 5) _____, 『증언집-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출판사, 1995.
- 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편, 『여성과 인권관련 UN자료집』, 정대협, 1998
- 7) _____, 『아시아의 여성인권-무력갈등과 성폭력』, 세계인권선언50주년기념국제세미나, 정대협, 1998
- 8) _____, 『일본군'위안부'문제와 2000년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 게이맥구결초청 국제학술심포지움(영어, 한글판), 1999.
- 9) _____, 정신대자료집(1), 정대협, 1991.
- 10) _____, 정신대자료집(2): 『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도전하고 있는가』, 정대협, 1992
- 11) _____, 정신대자료집(3):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정대협, 1992.
- 12) _____, 정신대자료집(4): 『강제중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법적책임』, 정대협, 1993.
- 13) _____, 정신대자료집(5):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는가?』, 정대협, 1995
- 14) _____, 정신대자료집(6):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활동』, 정대협, 1997.
- 15) _____, 정신대자료집(7): 『일본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정대협, 1997.
- 16) _____, 정신대자료집(8): 『제4차 아시아연대회의: 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은 일본군'위안부'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가?』, 정대협, 1997.
- 17) _____, 정신대자료집(9):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 정대협, 1998
- 18) _____, 정신대자료집(10): 『시모노세키 재판 평석회』, 정대협, 1998.
- 19) _____, 정신대자료집(11):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일어판』, 정대협, 1998.
- 20) _____, 정신대자료집(12):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영어판』, 정대협, 1998.
- 21) 한국정신대연구회, 『한일간의 미청산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
- 22) 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역), 『일본군 군대위안부』 소화, 1998.
- 23) 요시미 요시아키, 김순호(역), 『자료집 중군위안부』 요시미 요시아키, 서문당 1993.
- 24) 김윤심,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다』, 제8회 전태일문학수상집, 해냄, 1998

부록4.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전쟁자료책임센터(JWRC)

<http://www.jca.apc.org/JWRC>

영화 '낮은목소리' (한국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그린 영화 낮은목소리를 인터넷상에서 감상 할 수 있다.

Comfort Women (영어)

미국 워싱턴정신대대책위원회(WCCW)의 홈페이지로 미국에서의 활동과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Korealink 정신대 홈페이지(한국어)

Korealink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대 홈페이지로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 사진기록, 나눔의 집에 대한 소개, 관련기사들을 볼 수 있다.

半月城通信(일본어)

니프티 서브나 PCVAN에 한국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필자의 뉴스레터를 인터넷으로 제공한 곳.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자세히 검색할 수 있다.

The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Home Page(영어)

법률, 경제, 세계사, 정치, 정치학에 관한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곳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유엔 보고서를 볼 수 있다.

Chunghhee Sarah Soh(영어)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내 인류학에 관한 교수연합 사이트로 Comfort Women Project를 담고 있다. 이중 Comfort Women: A Web Reference는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참고자료들을 모아놓고 있다.

Viking Phoenix Web Page - Japan, Incorporated: Comfort Women Links(영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가장 폭넓은 링크를 가지고 있는 곳.

Comfort Women (영어)

미국 워싱턴정신대대책위원회(WCCW)의 홈페이지로 미국에서의 활동과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Korealink 정신대 홈페이지(한국어)

Korealink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대 홈페이지로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 사진기록, 나눔의 집에 대한 소개, 관련기사들을 볼 수 있다.

Women in Development(영어)

WID(Women in Development)는 개발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인식을 모토로 활동하는 단체로 이곳에서 제4차 세계 여성회의를 개최하였고 여기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강제연행의 체험을 듣는 모임(일본어)

강제연행에 대한 증언과 조사활동을 전개하는 모임으로 필리핀 위안부를 초청하여 증언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일부 문건은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과 컴퓨터 네트워크(일본어)

이곳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약간의 동향과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Center of Research and Documentation on Japan's War Responsibility (JWRC)(일본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UN 보고서를 일본정부가 채택할 것을 권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온라인 상에서 벌이는 홈페이지(平和資料館)

부록5 : 별첨자료들

1.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주요 대응

국제기구	권고내용	제출연월일
ICJ (국제법률가위원회)	일본은 전쟁범죄를 범했음으로 개인배상을 해야한다.한일보약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우선 고령인 피해자 개인에게 일시금 4만달러를 지불한 후 일본정부는 1) 입법조치 2) 행정기관 설치, 3) 제3자에 대한 중재위탁 등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1994.11.22
일본변호사 연합회	일본정부는 입법조치나 국제사법 기관에 의한 중재 등을 통하여 위안부 피해자에게 개인배상을 해야 한다.	1995.1.24
베이징여성회의 행동강령	정부나 국제기관 등은 전쟁 하의 강간, 특히 조직적 강간, 강제매춘이나 폭행, 성적노예제를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행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여 범죄자를 제소하여 피해자에게 완전한 보상을 행해야 한다.	1995.9.5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보고서	위안부제도는 성적노예제로서 인권에 반하는 죄에 해당된다. 한일조약 등 국가간 조약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일본정부에게는 법적 책임이 있다.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는 다음 6항목이다. 1) 국제법위반으로서 법적 책임을 다할 것, 2) 피해자에게 개인배상할 것, 3) 정부보관 자료 전체의 공개, 4) 서면으로 공식사죄할 것, 5) 역사교육, 6) 관여자의 색출 및 처벌	1996.2.6
ILO 전문가위원회 연차보고 (국제노동기구)	96년에 이어 국제노동기구 조약권고를 적용, 전문가위원회의 연차보고에서 다루어졌다. 위안부는 국제노동기구 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 일본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룸	1997.3.4
일본변호사 협회 (대만에 대한)	국민기금 활동이 대만에서 위안부, 정부당국, 제 정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일본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 배상을 위해 조속히 입법해결을 해야한다고 제안	1997.7.3
미 법무성, 731부대 위안부 정책관계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비인도적 행위에 가담한 자의 미국입국을 금지한 '홀츠만법'에 의거하여 731관계자와 위안부 정책관계자 16명(96.12)+17명(97.3)이 감시명단에 게재되어 입국금지	1996.12. 1997.3.20
미 하원의원 결의안 (검토중)	일본정부는 잔인한 전쟁범죄에 대해 분명한 사죄를 공식적으로 행하고 위안부나 납경학살 등 일본의 전쟁범죄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	1997.7
한국국회 결의: 일본전범의 출입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	1910.8.29-1945.8.15일까지 일본정부, 일본정부와 동맹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지시, 또는 연계하의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한 일에 관여한 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시행령은 마련 중	1997.11.18

2.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일본 망언록

90. 6. 6 시미즈 츠타오(清水傳雄)(노동성직업안정국장)
· 군위안부의 업무는 국가업무와 무관, 민간업자들이 한 일로 실태조사 어려움
91. 4. 21 오노 마사야키(小野正明)(주일대사관 참사관)
· 정신대 강제연행 사실없음. 보상문제는 65년 한일청구권협상 체결로 종결
94. 5. 6 나가노 시게토(永野茂門)(법상)
· 종군위안부는 당시의 공창,미국과 영국도 위안부를 두었음
94. 12. 22 무라야마 토미이치 수상
· 개인보상 불가, 종군위안부정책은 국제법위반이 아님. 경찰청 조사결과, 해당자료없음
96. 5. 30 이타카키 다다시(자민당 참의원의원)
· 종군위안부, 역사적 사실이 아님
96. 6. 5 오쿠노세이스케 (자민당 의원)
· 위안부는 상행위에 스스로 참여한 것으로 국가(군)와 무관
96. 6. 6 이타카키 다다시
· 위안부는 공창제도, 국가의 강제연행사실 없음(전 일본군 위안부 김상희(73세)와 면담한 자리에서)
96. 7. 1 오쿠노 세이스케(자민당 의원)
· 위안소는 업자가 운영
96. 7. 18 이타카키 다다시
· 군대위안부, 강제연행만 한 것 아님. 남경사건 희생자 20만명, 근거없음
96. 9. 20 사쿠라우치 요시오(자민련 중의원 의장)
· 군대위안부 강제모집, 도와야만 했던 전쟁의 배경위에서 생각해야 함
96. 9. 23 와타누키 다미스케(전 건설성 장관)
· 종군간호부는 있었으나 군대위안부는 없었음
97. 1. 15 에토 다카미(자민당 중의원)
· 일본관현의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 사실 근거없음
97. 2. 4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신진당 중의원)
· 에토 다카미 중의원과 가지야마 관방장관이 한말은 사실
97. 2. 6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宣伸) (자민당 의원)
· 종군위안부들, 일본군에 봉사한 일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 일본군이 아닌 매춘중개업자들이 모집. 모집역할도 대부분 한국인이나 중국인임.
98. 8. 1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농림 수산상)
· 강제연행이 분명치 않으므로 교과서에 실는 것은 부당.

3. 정대형의 주요 유엔활동 일지

날짜	활동 및 성과
1992. 8	제 44차 유엔 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을 결정하는 유엔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참가.
1993. 2.14-28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
1993.5.22	유엔 인권소위원회 현대노예제 실무회의 참석
1995. 6.14-25	오스트리아 비엔나 세계 인권회의의 참석, 이 회의는 한국과 아시아의 '위안부'문제가 국제 여성운동과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1993. 7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 참석, 여기에서 현대노예제부회 권고를 지지하는 결의 및 '전시노예제'문제 특별보고자를 임명하는 결의가 채택됨
1994. 1.14-26	유엔 인권위원회 참석, 처벌 문제가 제기됨 여성에 대한 폭력특별보고관제도가 설치되고,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씨가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됨
1994. 8. 3-17	유엔 인권소위원회 위원인 린다차베츠씨에 대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전시노예제에 관한 예비연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결의가 채택됨
1995.1.27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이 이 문제의 조사를 위해 한국, 일본 등 관계 각국을 방문하도록 요청, 쿠마라스와미 예비보고서(1월 11일 채택)를 환영하는 결의가 채택됨
1995.3.17	뉴욕에서 열리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28일)이 회의에서 "성적 노예제의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고 가해자를 조작 소추해야 함"이라는 구절(북경회의 행동강령 147 (F))을 포함하는 북경회의 최종문서의 원안이 채택됨
1995. 8	유엔 차별방지 소수자 위원회 참석. 린다차베츠씨를 '전시노예제'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자로 임명할 것을 인권위원회에 제안하는 권고를 채택.
1995. 9	북경 세계여성회의의 개최, 최종문서 행동강령147 (e) (f) 이 채택됨.
1996.2.6	쿠마라스와미씨의 '군사적 성적 노예제'에 관한 보고서가 공포됨. 그 부속문제로 위안부 문제가 다루어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위안부' 제도는 성적 노예제로서 인권에 반하는 죄에 해당된다. 한일 조약은 국가간 조약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일본정부에게는 법적 책임이 있다.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는 다음 6항목이다 1) 국제법 위반으로서 법적 책임을 다할 것 2) 피해자에게 개인 배상할 것 3) 정부보관자료 전체의 공개 4) 서면으로 공식 사죄할 것 5) 역사 교육 6) 관여자의 색출 및 처벌
1996.4.10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보고서'를 구두로 보고함.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정부의 거절 요구에도 불구하고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공인하는 결의를 채택
1996.6.17	유엔 현대노예제작업부회에 참석
1996.8.5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참석, 국민 기금 거부를 주장
1998. 3.2-3.13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
1998. 3.16-4.25	유엔인권위원회 참석
1998.8.12	유엔인권소위원회(차별 방지 소수자 보호소위원회)에서 특별 보고관인 게이 맥두갈(Gay Mcdougall)의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책임 및 책임자처벌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 발표, 채택

4. 정대협의 ILO 활동 일지

- 1995.11: 일본 오사카 지역의 영어특수학교 교사노조에서 처음으로 전문가 위원회에
군위안부문제 제기.
1996. 3: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에 강제노동금지규약 (ILO Convention 29조) 위반사항으
로 결론내어 기록됨.
- 1996.6 총회: 노동자위원회에서 중요논의사항으로 선택되지 못함.
그러나 노동자위원회에서: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일본정부에서 적절한 조치
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해에는 다루도록 하겠다고 선언함.
- 1996.11 전문가위원회: 한국노총(정대협 협의)에서 자료 보냄.
- 1997.3 :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수록됨.
강제노동금지규약 위반임을 재차 강조하고 구체적인 규약위반 사항을 자세히 기
록함. 또한 피해자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
- 1997.6 총회: 정대협에서 손희주 대표 파견. 도즈카 변호사도 참석.
노동자위원회에서 논란이 됨. (일본 노조 聯合의 로비가 강해서 미리 조정되었
다고 함) 결국 주요 안건으로 포함되지 못함.
그러나 총회의 기준적용심의위원회에서 주요 안건들을 다루기 전에, 군위안부문제
를 거론하면서 노동자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으나 보다 중요한 안건들에 밀려 이번
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다음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언급을 했음. 진전으로
볼 수 있다.
- 1997.11 전문가위원회를 위하여 한국노총 등 우리측에서 자료를 10월경에 보냄.
일본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문가위원회에서 다루어지
지 못함.
- 1998년 6월 총회: 정대협에서 정진성, 손희주 대표 파견. 사무국 관계 직원들 및 각국 노
조 대표들과 면담. 한국노총 안봉술 대표가 정신대문제에 관한 발언을 함.
지난해 전문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못했으므로, ILO 총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지
못함.
- 1998년 7월: 민주노총 (정대협과 협의) 이름으로 전문가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 1998년 11월: 전문가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논의됨.
- 1999년 3월: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수록되어 아래 네가지 사항이 제기됨
- (1) 일본정부의 군위안부 강제동원 및 성적 착취는 명백한 강제노동금지규약 위반임
 - (2) 국민기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의 형태가 아님
 - (3) 일본정부의 피해자 배상이 시간을 다투는 매우 시급한 시행사항임.
 - (4) 강제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의 적절한 피해배상을 권고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대협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과협력, 호소문을 만들어 국제자유노련(ICFTU)과 네델란드를 비롯한 주요 국가
의 노조에 발송했다.
1999. 6 정대협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1999년 6월 총회의 노동자 위원회에서 일본군'위
안부'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제네바의 ILO로 향함.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동참
이 회의의 결과로, 비록 주요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준적용 위원회에서
일본정부를 향한 강력한 권고안을 이끌어 냄.

퍼낸넷: (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퍼낸넷: 1999.12.

주소: 서대문구 중정로 2가 35번지 기아연빌딩 3층

전화: 02)365-4016, 392-5252

팩스: 02)365-4017

E-mail: jdh@peacenet.or.kr

Home Page: <http://witness.peacenet.or.kr>